Part 6
국제 농업 정보





국제 농업 정보 (2019. 6)

글로벌

- OECD 농촌정책 원칙
-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미국

- 미국 농산물 수출 유발효과 분석
- 식용동물용 약품 개발 현황
- 미국 소매업체의 식품안전현대화법 대응
- 미국 농업분야 자원 및 환경지표 변화 추이

유럽

- 핀란드, 단백질 자급률 향상을 위한 새로운 계획 발표
- 프랑스, 유기농 전환 농가 수 최대 기록
- 네덜란드 감사원, 직접지불금의 효과 분석 결과 발표
- 영국의 '5G RuralFirst' 프로젝트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농업정책의 역할 평가
- 필 호건 위원장, "농장·탄소·산림 계획"의 가능성 검토 요청

일본

- 일본, 2018년도 식생활 교육(食育) 백서 의결
- 수입규제 및 스마트 농업 활력 플랜 과제



글로벌

OECD 농촌정책 원칙*

❍ OECD 지역장관회의(2019.3월, 그리스)에서 OECD 회원국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나은 정책을 펼치고, UN 지속가능개발목표 등의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정책 원칙을 채택함.

- 세계화, 디지털화, 인구구조·기후 변화 등의 메가트렌드 속에서 농촌과 도시가 상호의존적이지만, 메가트렌드가 도시와 농촌에 미치는 근본적인 영향과 대응능력이 상이함에 따라 농촌정책과 관련한 3대 분야 11개 원칙을 제시함.

❍ **[농촌정책의 원칙 배경]** 세계화, 차세대 생산혁명, 인구구조 및 환경 변화 등이 경제·사회에 중대한 변혁을 가져오면서 정책 대응의 신속한 조정을 요구

- OECD 국가의 농촌정책은 농업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나, 점차 농업을 넘어서는 폭넓은 접근으로 전환함.
- 여기에는 산림, 광산, 농업, 수산업, 문화, 관광 등 농촌의 자산에 부가가치를 부여하는 활동을 포함함.
- 물자·사람·정보·금융·폐기물·사회적 관계의 공간 간 이동 등 도시와 농촌의 연계는 농촌 경제의 다양성을 강화함.

❍ **[농촌정책의 의미]** 농촌정책은 자원에 대한 가치 부여와 여가·생태·문화적 유산 고양 등을 통해 농촌의 경제·사회·경적 문제에 통합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기회를 고취하는 모든 정책 활동을 의미

-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시민사회와 민간부문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공서비스 제공과 제조업을 활성화하는 것도 포함함.

---

*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OECD 농촌정책 원칙출처: OECD 지역장관회의(2019.3.19.~20., 그리스 아테네)"에서 채택된 농촌정책원칙(Principles on Rural Policy)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표 1〉 농촌정책 3대 분야 11개 원칙

3대 분야	주요 원칙
Ⅰ. 농촌지역에 대한 정책의 목표 설정	**1. 농촌지역의 잠재력 극대화** • 디지털화, 세계화, 기후변화, 고령화, 도시화 등의 메가트렌드에 적응 및 대응하기 위해 농촌지역의 고유한 자산을 활용 • 도시 내 위치한 농촌 지역, 근거리 또는 원거리 농촌 등 농촌별 서로 다른 유형에 적합한 정책 대응
	2. 적절한 지역적 범위에서 정책과 거버넌스 구성 • 현재와 미래의 필요를 토대로 기능적 관련성에 부합하는 적정한 규모의 농촌정책 집행 • 농촌정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규모의 효과적인 정부 메커니즘 보장 • 시장실패 해결, 새로운 수요 대응 등을 위해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서비스와 인프라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급 장려
	3. 도시와 농촌의 상호의존성과 협력 지원 • 공공투자와 사업 설계 촉진을 위해 도시와 농촌의 공간적 연속성과 기능적 연계성을 활용 • 통합적인 개발 촉진을 위해 공동 전략 실천 및 도시와 농촌의 호혜적인(win-win) 협력관계 활성화
Ⅱ.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스마트한 농촌 건설을 위한 통합적·효과적 전략 채택	**4. 미래지향적 비전 설정** •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측면에서 농촌 주민의 웰빙 향상 • 정부 간 책임과 재원을 명확히 하고, 국가적 목표·전략, 지역별 특정한 필요,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와의 효과적 조정 보장 •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등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인구 구조, 기후 변화, 디지털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 • 환경의 질, 폐기물 관리, 자연자원 개발, 지역 호감도 개선, 기후변화 완화 등을 고려하는 통합적 공간 계획 활성화
	5. 세계화, 무역, 디지털화의 혜택을 누리도록 농촌지역의 잠재력 활용 • 농촌 지역이 지역 자산의 부가가치 증대 등 지역의 비교우위를 파악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농촌에서 인공지능·사물인터넷·블록체인 기술 등 차세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에 투자 • 생산의 비집중화 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규제 실시
	6.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기업가 정신 고취 • 운송비용 등 물리적 거리와 저밀도 인구분포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혁신과 전파 활성화 • 전통적 산업(농업, 제조업 등)과 신규산업(신재생에너지, 생명공학 등)의 혁신과 부가가치 증대 촉진 • 경영기술, 인프라, 특구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로의 통합 및 농촌 경제의 다양성 확대 지원 • 금융지원제도 등을 통해 농촌 지역의 기업가와 중소기업의 자본에 대한 접근 지원 • 농촌지역 주민과 회사가 대학·연구소·직업훈련기관 등에서 평생교육 훈련과 기술 향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

(계속)

3대 분야	주요 원칙
	7. 공공서비스 전달 전략과 농촌정책의 조화 • 교통, 보건, 교육 등 주요 정책이 농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농촌지역에 적합하도록 조정이 필요한 부문을 진단 • 소규모 지역서비스 제공에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하는 정책과 규제를 발굴하여 혁신적인 대안을 모색 • 혁신적인 방법의 서비스 제공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원격 의료, 원거리 교육 등을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 • 공공부문 인력과 주민에 대한 전자서비스 검색·사용 교육과 디지털화 촉진을 통해 스마트한 농촌 마을 개발
	8. 농촌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문화적 복원력 강화 • 자연자원과 토지이용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보장하고, 홍수 예방·생물다양성 증가 등 생태서비스의 가치 창출 • 농촌지역의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지원하고, 강력한 재해 대응·회복 시스템 구축 •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순환경제로의 전환 지원을 통해 에너지 부문의 저탄소화 추진 • 전통, 유산, 문화재의 보존, 고양, 가치 부여 • 농촌지역에 제도적 기반과 좋은 거버넌스를 갖추도록 보장하여 주민들이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Ⅲ. 농촌정책 이해관계자의 관여	**9. 농촌정책에 대한 범정부적 접근** • 농촌지역 웰빙을 제고하는 국가 정책의 통합을 위해 모든 부문과 수준의 정부가 참여 • 부처 간, 공공기관 간 정책적 일관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발굴, 해결 • 상충관계가 있을 수 있는 부문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인센티브, 규제, 조정 메커니즘 설계 • 통합적이고 조화로운 농촌정책을 통해 부문별 전략 간의 상호 보완성을 극대화
	10. 농촌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포용적 참여 활성화 •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지역의 이해관계자가 정책의 파트너가 되도록 지원 • 민간부문 및 비영리단체와 논의하고, 보다 나은 결과를 위해 그들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 • 공공 정보 전파, 데이터 창출·사용,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혁신 메커니즘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방안 마련
	11. 정책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독립적 평가, 책임성 증진 • 정책설계와 시행을 개선하기 위해 농촌정책을 평가하고 발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소통 • 농촌 복지를 평가·비교하기 위한 지표 개발 • 농촌공동체와 이해관계자가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발전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사용하기 쉬운 데이터를 제공 •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혁신적인 데이터 수집 방법 모색 • 정책 단계별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여 개선

※ 자료: 주간농업농촌동향(2019.06.10.).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 OECD 제47차 농업환경공동작업반 회의(2019.4.1.~4.2.)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농업환경정책 개선방안, 농업환경직불제의 분류 방안, 농업환경지표, 기후변화와 농업 등이 주로 논의됨.

- (농업환경직불제) OECD는 점차 중요성이 높아지는 각국의 농업환경직불제도를 정책대상, 집행력, 예산 등에 따라 분류 및 평가하여 비용효과적인 정책설계 방안을 제시할 계획임.
- (기후변화와 농업) OECD는 일관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무역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의 효과를 연구할 계획임을 공유함.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디지털 기회〉

❍ **[사무국]** 농업환경정책 개선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방안 연구 결과, 디지털 인프라 개발과 정보보호를 위한 규범 제정 등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함.

- 또한 이력추적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요 측면의 정책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 **[회원국]** 사무국의 작업 계획을 전반적으로 지지하면서 디지털 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도 강조되어야 하며, 디지털 기술의 수요 측면 정책 활용에 대한 연구는 실제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방안 도출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농업환경정책 분류〉

❍ **[사무국]** 일정한 환경 관련 의무를 준수하는 등의 대가로 농업인을 지원하는 농업환경직불금이 증가하고 있으나, 각국의 제도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희망국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농업환경직불금 분류를 시도할 계획이라고 안내함.

---

*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논의(출처: OECD 제47차 농업환경공동작업반회의(2019.4.1.~4.2.)" 주요 논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 농업환경직불금을 정책대상(targeting), 집행(enforcement), 예산 비용(budget) 등에 따라 분류·평가하고, 비용 대비 효과적인 농업환경직불 정책 방안 강구함.

❍ **[회원국]** 농업환경정책 분류가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농업환경정책 전반이 아닌 농업환경직불제에 초점을 두어 실제 사례를 연구하는 것이 유용하고, △분류 기준의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정책 평가 시에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함.

〈농업환경지표〉

❍ **[사무국]** 각국의 농업환경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 중인 일람표(dashboard)를 제시하고, 향후 농업환경지표 데이터 수집 방법 관련 변경 사항을 제안함.
- 일람표는 국가별 설명을 추가하고 자료 업데이트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갱신해서 공개할 예정임.
- 자료 수집이 어려웠던 수질과 토양침식 지표 수집은 중단하고 토양침식은 EU 위원회의 공동연구센터(European Commission Joint Research Centre)의 데이터를 사용할 예정이며, 기후관련 지표(weather-based indicator)를 추가할 계획임.

❍ **[회원국]** △EU의 토양침식 데이터가 아시아 지역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 우려, △일람표 관련, 지형, 토양, 기후 조건 등 나라마다 다양한 농업환경을 갖고 있음에도 각국의 지표를 OECD 평균과 비교하는 것은 문제, △새로운 생물다양성 지표 등에 대한 고민 필요 등 사무국의 제안에 다양한 의견을 나타냄.

〈기후변화와 농업〉

❍ **[사무국]** 기후변화는 식량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며 온실가스 배출 오염자 부담, 세금-보조금 조합 등 여러 가지의 정책수단이 있겠으나 핵심사항은 정부가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정책의 불확실성을 피하여 농업인들이 저탄소 농업으로의 투자 전환 결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 또한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역의 역할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안내함.

❍ **[회원국]** 사무국의 작업을 대체로 지지하면서 기후변화와 무역에 대한 분석이 개별 국가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 등을 제기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동향(2019.5.27.).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국

미국 농산물 수출 유발효과 분석*

❍ 농산물 수출은 생산, 고용, 소득증진, 구매력 등 국내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주고 있음. 미국 농업경제연구소(ERS)는 2017년 미국 농산물 수출 1달러가 1.3달러의 산업유발 효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함.

- 2017년 미국 농산물 수출액 1,300억 달러로 약 1,790억 달러의 산업 유발효과가 발생하였으며, 총 3,170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옴.

❍ 농산물 수출액 10억 달러당 약 8,400개의 고용 창출효과가 있으며, 2017년 농산물 수출액으로 추산 시 약 12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보임.

- 이 중 79만 5,000개는 비농업 분야 일자리로, 연료, 비료, 기타 농업 투입재의 생산, 거래, 운송 분야이며, 이외에도 자료 정리, 금융, 법률 상담, 경영, 관리 분야 고용도 포함됨.

❍ 2004~2017년 미국 농산물 수출로 인한 비농업분야 고용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음. 2004년 이후 농산물 수출로 인한 농업 및 비농업분야 고용을 분석한 결과, 비농업분야 고용이 농업분야 고용보다 두 배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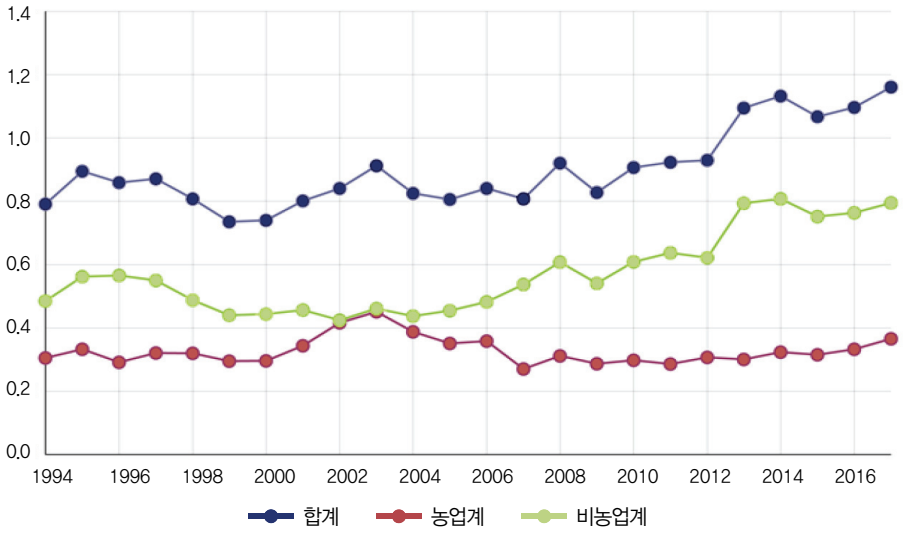
---

* 미국 농무부(USDA) 농업경제연구소(ERS)가 발표한 "U.S. Agricultural Exports Supported 1.2 Million Full-Time Jobs in 2017"(2019.6.3.)을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 농산물 수출이 대두, 옥수수 및 곡물 같은 원재료 수출보다는 가공식품, 축산 가공품 등으로 확대되면서 비농업분야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1〉 미국 농산물 수출액에 따른 농업/비농업 분야 고용창출 추이

단위: 일자리 개수(백만 개)



자료: USDA, ERS, Agricultural Trade Multipliers.

※ 자료: 주간농업농촌동향(2019.06.17.).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용동물용 약품 개발 현황*

❍ 항생제는 보건 및 수의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남용할 경우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이 출현할 수 있어 사용에 주의가 요구됨.

❍ 정책담당자, 소비자 및 약품업계에서는 농업분야에서 소비되는 항생제에 대해 주의를 집중하고 있음. 특히 식용동물에 대한 항생제 남용 및 그에 따른 내성균 발생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일부에서는 항생제 없이 생산된 축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미국 농무부(USDA) 농업경제연구소(ERS)가 발표한 "Developing Alternatives to Antibiotics Used in Food Animal Production"(2019.5.30.)을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 이에 따라 항생제 판매량 감소와 신규 항생제 개발 감소, 비항생제 약품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미국산 축산물 수출이 증가하면서 가축질병이 전 세계로 확산될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음.

❍ 식용동물용 항생제 판매량은 2015~2017년간 미국에서는 30% 감소하였으며, 2010~2015년 17개 EU 국가에서는 31%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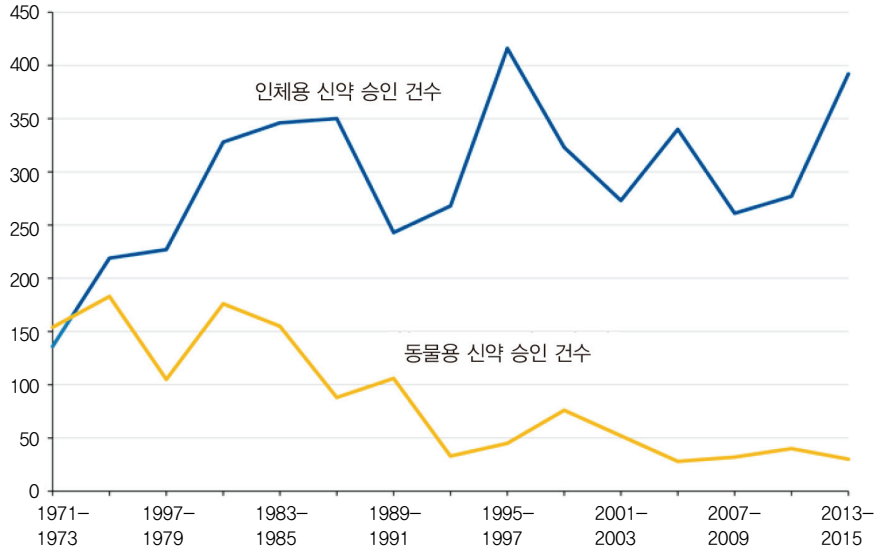
- 미국에서 식용동물용 항생제 판매량이 감소한 이유는 무항생제로 사육된 닭고기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참고로 무항생제 닭고기는 2012년 생산량의 2.7%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에는 44%로 증가하였음.
- 추가적으로 2017년부터 시행된 성장촉진 항생제 투입금지로 항생제 판매량이 감소함.

❍ 신약 개발비용이 증가하면서 동물 약품용 연구개발 비용은 증가하지만, 신규인증된 동물 약품 수는 감소하는 추세임. 또한 신규 개발된 약품 중 애완동물용 약품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애완동물용 및 식용동물용 약품은 별도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애완동물용 약품개발이 식용동물용 약품개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됨.
- 식용동물용 신규 약품 중 항생제 승인 건수는 감소하고 있음. 1992년 이후 신규 승인된 항생제는 대부분 인체용 항생제로 개발된 품목임.
- 1992년 복제약[1] 사용이 허가된 이후, 복제약은 미국 전체 동물용 약품 승인 건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복제약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신약 연구개발 투자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1) 신규 개발된 의약품의 법적 권한이 소멸한 이후 이를 따라서 만든 의약품을 말함(한경 경제용어사전).

〈그림 2〉 인체·동물용 신약 승인 현황



자료: USDA, ERS Calculator from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Center for Veterinary Medicine Green Book.

※ 자료: 주간농업농촌동향(2019.06.10.).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국 소매업체의 식품안전현대화법 대응*

❍ 식중독 사고 방지를 위해 미국 연방정부는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을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 법안에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와 판매하는 소매업체에게 해당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식품안전현대화법은 연방정부가 농가 단위의 식품 세균 오염방지를 위해 시행한 첫 번째 법안이며, 소매업체, 급식업자, 식품가공업자들에게도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소매업체는 식품 안전유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본 연구에서는 식품안전현대화법 중 소매업체에게 적용되는 조항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시행함.

* 미국 농무부(USDA) 농업경제연구소(ERS)가 발표한 "Food Safety Requirements for Produce Growers: Retailer Demands and the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2019"(2019.4.)를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 식품안전현대화법에서 소매업체에게 전문기관의 식품 안전검사를 요구하지는 않고 있으나, 대부분 소매업체들은 관행적으로 식품 안전검사를 실시함.

- 설문에 응답한 9개 소매업체 중 8개 업체가 생산자에게 검사를 요청하였으며, 1개 업체는 소규모 생산자에게는 검사를 요청하지 않고 있었음. 응답한 소매업체들은 안전검사를 향후에도 계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변함.

❍ 3개 소매업체는 생산자의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의 안전검사를 하고 있으며, 다른 3개 업체는 소규모 생산자에게는 더 간략하게, 나머지 3개 업체는 도매업체 기준의 안전검사를 일률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음. 참고로 식품안전현대화법은 소규모 생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식품안전현대화법에서 조사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감자, 비트 등의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도 소매업체들은 안전검사를 요구하는 등 보다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음. 이는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으로 해석됨.

- 이에 따라 강화된 안전검사 시행으로 소매업체는 비용문제 등으로 생산자 일부와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이러한 사례는 소규모 생산업자에게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소매업체에서는 식품안전현대화법 적용이 현재 소매업체에 납품 중인 생산자에게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및 소규모 소매업체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동향(2019.6.3.).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국 농업분야 자원 및 환경지표 변화 추이



❍ 농가 수는 1935년 680만 가구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1970년대 생산성 향상에 따른 잉여 생산물이 증가하면서 농가 수는 급격한 감소세를 보임. 이후 농가수는 1980년대까지 완만히 감소하다가 1990년대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 1990년대 이후 농업수입에 의존하지 않는 소규모 농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 210여만 농가가 약 9억 1,500만 에이커의 경작지를 보유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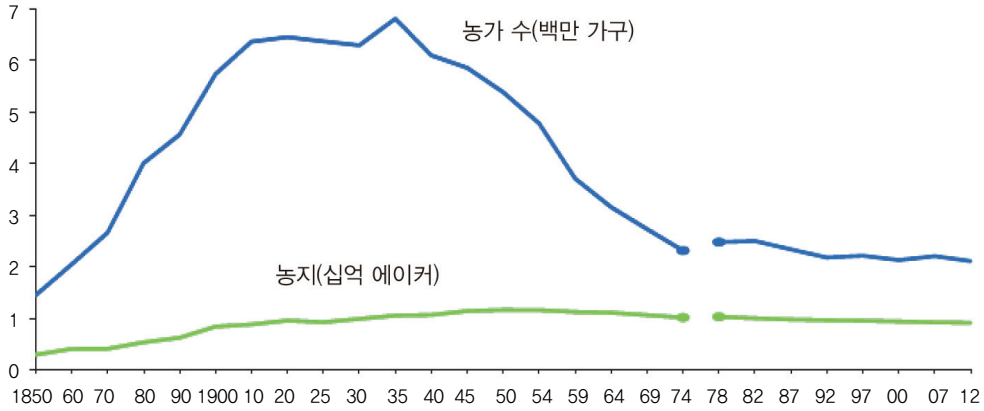
❍ 1949~2012년 농지 면적은 8,600만 에이커로 감소하였으며, 이후 연방 토지 관리프로그램, 시장 흐름, 기술발달로 면적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 이에 반해 도심지 면적은 경제 발달 및 인구증가로 지난 60년간 꾸준히 증가함.

- 1949~1997년 동안 목초지 면적은 5,200만 에이커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7,500만 에이커까지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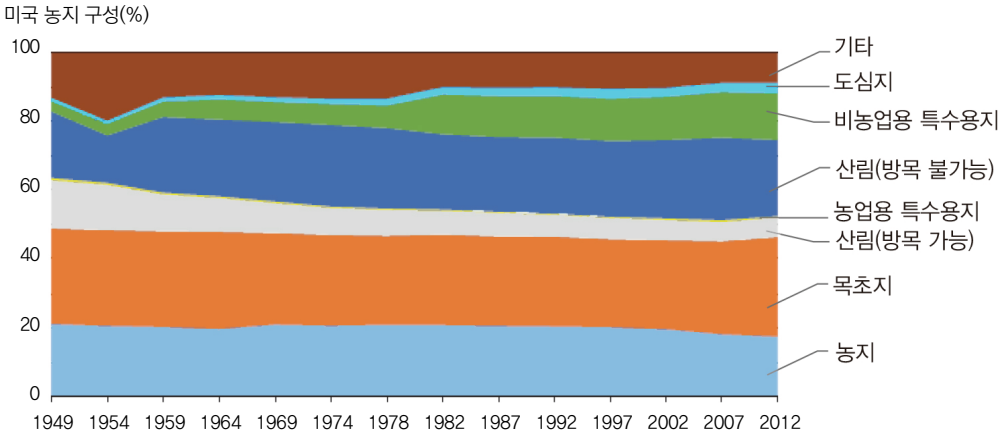
❍ 직불금이 지불되는 프로그램은 크게 작물관련, 환경보전, 경작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 (작물관련 프로그램) 특정 작물(주요 곡물 및 사료작물, 유지 작물, 두류)을 재배 시 지원되는 직불금으로 소규모 중액 농가, 중규모, 대규모 농가가 관련 직불금 중 75%를 수령하고 있음.
- (환경 보전프로그램) 농경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아니지만 환경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불함. 주로 은퇴농, 겸업농, 소규모 소액농가가 직불금의 73%를 수령함.
- (경작지 프로그램) 사용 중인 농경지에 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적용하고자 할 때 기술 및 재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주로 중규모 및 대규모 농가가 전체 직불금의 59%를 수령하고 있음.

〈그림 3〉 미국 농가 및 농지 변화 추이



〈그림 4〉 미국 경작지 구성 변화 추이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Agricul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Indicators (2019).

〈표 2〉 미국 농가 규모 및 그에 따른 직불금 수령 비율

단위: %

구분		정의	농가 수	생산액	경지 면적	작물관련 프로그램	환경보전 프로그램	경작지 프로그램	총 직불금
은퇴농		가구주가 은퇴한 농가	10.7	1.3	3.9	1.7	21.6	1.5	5.3
겸업농		농업외 직업을 가진 농가	40.8	4.9	17.1	5.9	28.6	10.5	10.9
소규모 농가	소액 농가	생산액 15만 달러 이하 농가	31.7	9.5	18.2	8.7	21.9	6.4	11
	중액 농가	생산액 15만~ 35만 달러 농가	5.7	10.3	12.7	11.3	6.5	14.2	10.9
중규모 농가		생산액 35만~ 99만 달러 농가	6.3	22.7	23.2	33	10.3	29.3	28.1
대규모 농가		생산액 1백만 ~5백만 달러 농가	2.5	23.1	15.9	30.5	5.4	29.9	25.7
초대규모 농가		생산액 5백만 달러 이상 농가	0.3	15.6	2.4	3.8	0.4	4	3.2
비가족농		경영자가 사업체를 미보유한 농장	2.2	12.4	6.5	5.2	5.2	4.2	5
농가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Agricul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Indicators (2019)

※ 자료: 주간농업농촌동향(2019.5.27.).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럽

핀란드, 단백질 자급률 향상을 위한 새로운 계획 발표

❍ 핀란드 연구원들은 대체 단백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식량과 사료를 위한 지속가능한 단백질 공급으로서 국내산 곡물, 목초, 세포농업(cellular agriculture), 어류, 곤충의 사용 촉진을 위한 새로운 실행 계획을 개발하였음.

- 계획의 목표는 핀란드의 단백질 자급자족 능력 향상과 탄소 중립적인 먹이 사슬 구축으로 핀란드 국가기술연구센터(VTT)와 핀란드 곡물위원회(Cereal Committee)(VYR)가 발표한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음.
- 핀란드 소비자들의 동물성 제품 대체재 수요의 지속성으로 인해 2015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식물성 단백질 제품 소비량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핀란드 농업부 대표와 연구원들에 따르면 식물, 곤충, 세포 배양 단백질(cell-farmed proteins)은 핀란드 및 EU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콩과 동물성 제품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함.

❍ VTT와 VYR에 따르면 계획 달성을 위해서는 품종 개량과 농산물 및 원료 산업 간의 긴밀한 협조 등 현재 농업 생산 관행에 중대한 변화가 필요함.

- VTT 연구팀 리더(Emilia Nordlund)는 “상당한 연구 노력 외에도 사업자들을 위한 네트워크 및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단백질 생산과정에서 목초, 곤충, 세포 농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중요하다”라고 언급함.
- 계획 실행을 위해 VYR은 VTT 연구팀 리더가 이끄는 단백질에 관한 작업그룹을 구성했으며, 이들은 주로 곡물, 콩과 식물(legumes), 유지종자(oilseeds) 및 잔디에 초점을 두어 단백질 자급력과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모델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식품 공급망 모든 부문의 사업자들은 작업그룹에 가입하도록 초청됨.

❑ 자급자족을 위한 육류 생산 절단

❍ VTT 연구팀 리더(Emilia Nordlund)는 보고서 발표 후 “핀란드의 현재 자급자족률은 20%미만이지만, 10년 후에는 100%에 가까운 자급자족률 달성을 할수 있을 것이다”고 언급했으며, 무엇보다 육류 소비의 견고한 감소가 달성된다면 더욱 빠르게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음.

- 예를 들어, VTT 과학자들은 적색 육류 소비를 0으로 줄이고, 가금류 소비량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핀란드의 재배면적 중 80%만이 필요할 것이라고 계산함.
- VTT 연구원들은 단백질 자급자족률을 목표로 한다면 사료 생산의 필요성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함.

❑ EU의 단백질 전략

❍ 2018년 11월, EU집행위원회는 그동안 고대했던 식물 단백질 개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제3국으로부터의 식물 단백질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을 제시함.

- EU집행위원회는 EU의 단백질 작물 생산량이 최근의 수요 증가를 감당하기에는 불충분하여 소위 ‘단백질 적자’로 이어진다고 결론을 내림. 이는 주로 기후 및 농업 경제 요인의 다양성으로 인한 것임.
- EU 단백질 전략(EU Protein Strategy)의 중요한 후속 조치로 EU집행위원회는 5월 20일에 새로운 EU Feed Protein Balance Sheet을 발표함.
- 자세한 수치는 2017년-2018년간 EU에서 소비된 동물 사료 단백질의 80%가 EU 내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남.

❍ 핀란드 중앙 농업 농산물 및 산림소유자 연합(Central Union of Agricultural Producers and Forest Owners)(MTK)의 곡물담당 사무국장(Max Schulman)과 VYR 이사회 의장은 ‘EU는 유럽에서 생산되는 단백질 공급원으로 사료용 대두(forage soybean)를 대체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다”고 언급함.

- “사실 많은 사업자가 국내 단백질 공급원으로 사료용 대두를 대체하기 시작했으며, 가까운 미래에 국내 단백질 공급원에 기초하는 사료의 사용이 몇 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함.

- 그러나 사무국장(Max Schulman)은 이는 “단백질 작물 재배와 생산량 증대를 위해 훨씬 더 넓은 지역을 할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품질 재배 품종 육종을 목표로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2019년 2월, EU집행위원회는 이미 EU 식물 단백질 시장의 새로운 기회에 관한 연구를 발표함.

- 유기농 및 유전자 변형 없는 공급망에 대한 소비자 수요 증가와 플렉시테리언(flexitarian)[3], 채식주의자(vegetarian)[4], 엄격한 채식주의자(vegan)[5] 식단의 수요 증가가 두류(pulses) 및 가공된 단백질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함.

※ 자료: IEG Policy Weekly Briefing
(https://iegpolicy.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 com/PL220375/New-action-plan-launched-to-enhance-protein-selfsufficiency-in-Finland) (2019.05.31.)

프랑스, 유기농 전환 농가 수 최대 기록



❍ 지난 2019년 6월 4일, 유기농업진흥회(Agence Bio)는 연례 시장리뷰에서 EU 최대 농업 생산국인 프랑스는 2018년 기준 5,000여 개의 유기농 농장이 추가되었으며, 이는 2016년과 2017년의 기록인 4,200을 상회하는 수치라고 밝힘.

- 이에 유기농 농장 수는 13% 증가하여 총 4만 1,600개로 이는 프랑스 전체 농장의 9.5%에 해당함.
- 유기농 농지 면적은 17% 이상 증가한 200만 헥타르로 이는 전체 농지의 7.5%에 해당함.
- 농작물부문에서 유기농 지역이 51만 4,000헥타르로 31%나 급증하였으며, 이는 전체 농작물 면적의 4.3%에 해당함.

3) 채식주의 식사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육류나 생선도 먹는 사람을 의미함.
4) 고기(생선)을 먹지 않음.
5) 고기는 물론 우유, 달걀도 먹지 않음. 어떤 이들은 실크나 가죽같이 동물에게서 원료를 얻는 제품도 사용하지 않음.

❍ Agnece Bio 회장(Philippe Henry)은 “농작물 분야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며, 통상적인 것이 아니었던 유기농으로의 전환이 이제는 정상적인 일이 되었다”고 언급함.

- 프랑스 유기농 개발 및 촉진 기관(Agency for the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organic agriculture)은 전통 곡물의 낮은 가격과 유기 농업을 위한 CAP 보조금 및 공급망 투자가 더 많은 농부가 유기 농업으로 전환하도록 장려하였다고 분석함.

❍ 프랑스 내 유기 농지 비율은 정부가 정한 2022년 목표치인 15%의 절반에 불과함.

- 가장 최근의 유럽통계청(Eurostat)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체 농지에서 유기 농지의 비율은 여전히 6%로, EU 28개국 평균인 7%보다 낮음.
- 그러나 절대적 기준으로 가장 많은 유기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인 스페인(200만 헥타르), 이탈리아(190만 헥타르)에 이어 프랑스는 170만 헥타르를 보유하고 있음.

❑ 증가하는 유기농식품 판매

❍ Agence Bio는 유기농 생산의 급격한 증가는 증가하는 소비자 수요와 수입 제한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함.

- 지난 해 프랑스의 유기농식품 판매량은 15.7% 증가한 97억 유로이며, 이는 프랑스 가구의 식품소비 총액의 5%에 달하는 금액임.
- 이에 프랑스는 109억 유로의 매출을 기록한 독일에 이어 EU에서 두 번째로 큰 유기농식품 시장으로 자리매김함.
- 또한 판매량의 49%를 차지하는 슈퍼마켓은 소비자들에게 유기농식품에 대한 더 많은 접근성을 제공함으로써 수요 촉진을 이끌었다고 언급함.
- 한편, 유기농식품 수입 비중은 31%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 Agence Bio는 빠른 성장이 농부들의 가격 프리미엄을 침식하고, 지속가능성이 낮아지는 관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낮게 평가하면서 유기농부문이 해당 상황에 적응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함.

- 2019년 5월 10일, 네덜란드의 한 조사 결과, 농업인들이 동물복지와 화학약품 사용에 관한 EU의 모든 유기농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판매점에서 유기농제품으로 표기하여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료: IEG Policy
(https://iegpolicy.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PL220473/Record-number-of-French-farmers-switch-to-organic) (2019.6.6.)

네덜란드 감사원, 직접지불금의 효과 분석 결과 발표*



❍ 네덜란드 감사원은 2014년 공동농업정책 직접지불금이 2만 5,000명의 네덜란드 농업인에게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분석한 결과를 발표함.

❍ 분석 결과 직접지불금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주로 평균 소득 이상의 농업인들이 소득 지원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보조에도 불구하고 최저 임금 수준 이하의 연소득(19,253유로)을 기록한 네덜란드 농업인이 전체의 36%였으며, 이들은 전체 직접지불금의 21%를 수령하는데 그쳤음.
- 반면, 6만 6,000유로(네덜란드 전체 평균 소득의 2배에 해당) 이상의 연소득을 기록한 농업인에 대한 지원액이 전체의 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보조금을 수령한 농업인의 1/3 이상은 소득보조 없이도 평균 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네덜란드 농업인은 대부분 평균적인 노동자보다 더 높은 순소득을 올리고 있었으며, 특히 대농의 소득 수준은 매우 높았음.

❍ 유럽연합은 현재 공동농업정책 이행 기간인 2014-2020년 약 3,080억 유로의 예산을 직접지불금으로 책정하였으며, 이 중 네덜란드에 할당된 금액은 약 50억 유로임.

❍ 현재 직접지불금은 면적을 기준으로 지급되어 대농이 소농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6]하게 됨.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소유자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가며 농가 간 소득 격차를 확대시킴.

---

* IEG Policy에서 발표한 "Most CAP direct payments go to farmers with high income, Dutch auditors find"(2019.5.29.)를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6) 현재 직접지불금 분배 체계는 모든 회원국에서 동일함.

-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소득 지원액의 80%가 20%의 농가에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프랑스 감사원은 현재 직접지불금 체계는 구시대적이며 "정당한 근거 없이" 농가 간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비판[7]한 바 있음.
- 네덜란드 정부는 오래전부터 직접지불금이 농가의 규모화와 이로 인한 과다 생산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직접지불금 체계를 비판해 왔음.

❍ 네덜란드 정부는 농업 예산의 더 많은 부분이 단순 보조 대신 연구와 혁신분야에 투자되길 원하고 있으며, 이를 공동농업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회원국들과 협상 중에 있음.

- 유럽연합 관계자들은 현 직접지불금 체계는 공동농업정책의 목적 중 하나인 농업인의 삶의 질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적절한 수준의 삶의 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2018년 6월 공정한 직접지불금 체계를 위해 농가당 직접지불금액이 10만 유로 이상을 넘을 수 없도록 상한선을 설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그러나 유럽연합 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에서는 상한선 설정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동향(2019.6.17.).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영국의 '5G RuralFirst' 프로젝트*



❍ '5G RuralFirst'는 IT 기업인 시스코와 스트래스클라이드 대학이 주도하고 민간·정부·학계가 참여하는 공동 혁신 프로젝트임.

- 프로젝트의 일차적인 목표는 농촌지역에 5G 무선 모바일 연결성(connectivity)을 위한 테스트 환경을 형성하고 실험하는 것임.

7)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_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2019.1.21.).

* 영국 5G RuralFirst 홈페이지(https://www.5gruralfirst.org/what-is-5gruralfirst/)에 게시된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 프로젝트는 영국 정부의 '5G 테스트베드와 실험 프로그램'과 '5G 전략'의 일환[8]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중요 산업(농업, 관광, 재생에너지, 제조업) 분야에서 위탁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 모델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

❍ **[사물인터넷, IoT]** 5G를 통해 데이터 수집 기기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영국 농업은 급격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음.

- (수산업) IoT를 통해 연어 양식장 pH/산소/염분/온도를 측정하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함.
- (풍력 발전) IoT 센서로 통합적 모니터링과 풍속 점검이 가능해지고 날씨 위험을 미리 확인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지역사회와 인프라]** 5G로 연결성을 강화하여 지역 간 디지털 격차 해소하고 소외된 지역에 공공서비스 공급이 가능해짐.

- (모바일 브로드밴드) 일반 전화 연결 상태가 열악한 지역에 5G 기술들을 시험 적용함.
- (선박들 간 연계) 26GHz 고주파를 사용하여 오크니 제도(약 70개의 섬으로 이루어짐)를 왕래하는 선박들 간 광대역 통신망을 형성할 수 있음.
- (리지오넬라균 탐지) 물 관련 의무준수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해짐.
- (관광 최적화) 농촌 관광 매니저가 농촌지역 유명 관광지 방문객 수를 실시간으로 점검함으로써 최적화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

❍ **[방송]** BBC는 농촌에 5G 기기로 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실험했음. 목적은 기존 지상파 네트워크가 담당하던 방송 서비스를 5G 네트워크가 대체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자 하는 것임.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업 모델의 수익성임.

❍ **[농기계]** 5G 특성이 농기계에 접목됨으로써 생산성과 효율성 증대가 가능해짐.

- (핸즈프리 자율 트랙터) 5G를 통해 트랙터의 자율 시스템 통제가 가능한지를 점검함.
- (드론 활용 토양 분석) 필요한 지역의 토양을 드론을 활용해 분석하고 트랙터로 비료를 살포함.
- (동물 원격 진료)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을 사용하여 수의사 원격 진료가

8) 2018년 7월 23일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가 발표한 5G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재원 사용 우선순위를 농촌지역에 둔다는 내용이 담겨 있음.

가능해짐. 농업인이 치료에 궁금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물어보고 치료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음.

- (동물용 목걸이) 소의 반추 과정, 식습관 관련 데이터를 목걸이 모양 응답기를 통해 수집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소의 건강 상태를 관리함.
- (고해상도 카메라) 900미터 상공에서 고해상도 카메라를 통해 토양 상태, 가축 방목 패턴, 질병 확산 정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동향(2019.6.10.).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농업정책의 역할 평가*



❍ 농업·농촌은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영역이며, 공동농업정책[10]은 기후변화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공동농업정책의 지원으로 농업 분야는 가족농 보호, 다양성 유지, 농지 유기 방지 외에도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을 해올 수 있었음.

❍ 공동농업정책이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방출량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음.

- (녹색화 조치) 영구목초지 유지와 생태초점지역 지정[11]으로 온실가스 감소에 크게 기여함. 시뮬레이션 결과, 녹색화 조치는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방출량을 연간 2%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 (농촌개발프로그램) 온실가스 방출량을 연간 1.5% 감소시켰으며, 공동농업정책이 지원하는 유기농업 역시 농업 분야 방출량 감소에 기여했음.
- (자발적 연계 지원) 생산과 연계된 소득 지원은 분야에 따라 대조적인 결과가 나타남. 축산업에서 자발적 연계 지원은 온실가스의 순증가를 가져오지만(계량화는 불가능함), 두류식물에서는 온실가스 방출량을 (소량이지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

9)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발표한"Study on the CAP and climate change: the case for a stronger common agricultural policy for climate action"(2019.5.27.)을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10) 공동농업정책은 유럽연합 시민들에게 질 좋고 저렴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1962년 처음으로 실시되었으며, 이후 2013년 개정 시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 목적으로 설정하였음.

11) 15ha를 초과하는 경작지를 보유한 농민들은 최소한 자신이 보유한 토지의 5%를 '생태초점구역'으로 지정하고 농장 내의 생물다양성 보호와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이를 관리해야 함.

❍ 공동농업정책이 기후와 온실가스 방출량에 미치는 효과를 전부 계량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간접적인 효과에 주목하였음. 예를 들면, 농업인 소득 지원은 유럽 전역에서 농가 다양성 유지에 기여하여 환경적 이득을 가져다 줌. 또한 공동농업정책은 회원국들의 기후변화 기준을 제고시키는 효과도 있었음.

❍ 필 호건 농업위원장은 "농업인이 수행한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도록 하고 기후변화 영향에 적합한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역할"이며 "이것이 추진 중인 공동농업정책 개혁에서 이전보다 더 높은 환경과 기후변화 목표들을 설정한 이유"라고 밝혔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동향(2019.6.3.).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필 호건 위원장, "농장·탄소·산림 계획"의 가능성 검토 요청*



❍ 2019년 5월 14일 EU이사회 회의에서 필 호건(Phil Hogan) EU집행위원회 농업부문 위원장은 각 회원국 각료들에게 "농장·탄소·산림 계획(Farm Carbon Forest initiative)"의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음.

- "농장·탄소·산림 계획"은 성공적으로 탄소를 절감·저장·격리한 농업인에게 국가와 유럽연합의 기후 목적 달성에 기여한 공로로 상당액을 보상해 주는 것임.
- 한편, 필 호건 위원장은 지난 4월 25일에는 "Our Forests, Our Future" 회의에서 생물다양성 친화적인 방식으로 조림이 이루어진 경우 해마다 헥타르당 일정 금액을 7년 동안 지급하는 정책("1-hectare initiative")을 발표한 바 있음. 재원은 공동농업정책 제2축 예산에서 충당함.

❍ 필 호건 위원장은 "농식품분야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부터는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라며, "EU에서 농업분야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 EU집행위원회가 발표한 "Commissioner Hogan announces idea for "Farm Carbon Forest" initiative"(2019.5.15.)와 "Keynote speech by Commissioner Phil Hogan at 'Our Forests, Our Future' conference"(2019.4.25.)를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파리협정에 따라 2050년까지 탄소중립성(carbon neutrality, 순탄소배출량이 0인 상태)을 달성하려면 탄소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라고 언급함.

❍ "농장·탄소·산림 계획"은 공공의 편익를 제공한 농업인에게 보상하는 것임. 성과에 기반한 보상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공동농업정책이 추구하는 방향에 부합됨. 그러나 실제 집행을 위해서는 개별 회원국의 정치적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함. 따라서 필 호건 위원장은 회원국이 "농장·탄소·산림 계획"을 전략적 계획(strategic plan)[12]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음.

❍ EU집행위원회는 "농장·탄소·산림 계획"이 제대로 실행된다면 경제적 이득 외에도 환경적 이득을 가져다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음. 기후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식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유럽연합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증가하고 있으므로 "농장·탄소·산림 계획"의 가치는 점차 증대될 것임.

※ 자료: 주간농업농촌동향(2019.5.27.).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본

일본, 2018년도 식생활 교육(食育) 백서 의결

❍ 일본 정부는 6월 4일 '2018년도 식생활 교육 백서'를 의결하고, '건강수명[13] 연장으로 연결되는 식생활 교육'을 특집으로 다뤘음.

12) 새로운 공동농업정책(2020년 이후 CAP)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회원국이 수립하는 계획임.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일관성 확보와 유지를 위해 각 회원국의 계획을 승인할 권리가 있음.

13) 건강수명이란 건강상의 문제로 일상생활에 제한이 없이 생활가능한 기간임. 2010년과 2016년 건강수명을 비교해보면 남성이 70.42세에서 72.14세로, 여성은 73.63세에서 74.79세로 상승하고 있음.

- 특히, 20~30대의 건강 의식이 낮고, 가정 내 식생활 교육은 가족 구성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태를 재차 부각시켰음. 이에 스스로 건전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식(食)의 자립'을 추진할 필요성을 지적하였음.

❍ 이번 특집에서는 20~30대의 식생활 교육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40대 이상이 20~30대였을 때의 식생활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를 포함시켰음.

- 현재 40대가 20~30대 때의 식생활을 "좋았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23.3%, "좋지 않았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35.8%로 나타남.
- 좋았다고 응답한 이유의 절반은 "집에서 준비해 줬기 때문에"라고 응답하였음. 좋지 않았다고 응답한 절반이 "건강에 대한 의식이 낮았음"이라고 응답하였음.

❍ 농림수산성소비자행정·식육과는 "젊을 때는 건강에 대한 불안이 없기 때문에 식생활에 대한 의식이 낮으며,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동안에는 괜찮지만 진학이나 취업으로 인해 독립하게 되면 식사에 소홀해지기 쉽다"라고 분석함.

- 또한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건전한 식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식(食)의 자립이 향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였음.

❍ 2020년까지 5개년으로 진행 중인 제3차 식생활 교육 추진 기본 계획(第3次食育推進基本計画)은 건강수명 연장을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고 있음.

- 특히 개선되지 않는 것은 20~30대의 식생활임.
- 계획에서는 주찬(고기, 생선, 계란, 콩 등 단백질류)과 부찬(비타민, 버섯, 해초 등 식물 섬유질을 포함한 채소) 등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젊은 세대 비율을 55% 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18년도에는 39.7%로 계획을 구상한 2015년도의 43.2% 보다 밑돌고 있음.

2018년도 식생활 교육 백서 개요 및 포인트

[개요]

- 1부에서는 '건강수명 연장으로 연결되는 식생활 교육 추진'을 특집으로 하여, 현황 분석과 함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중요한 일상 식생활을 둘러싼 활동 등을 설명하고 있음.
- 2부에서는 '제3차 식생활 교육 추진 기본 계획(2016년 3월 18일 식생활 교육 추진 회의 결정)의 사항의 구체적인 대응 상황에 대하여 전국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화제성이 높은 주제를 칼럼으로 소개함.
- 3부에서는 '제3차 식생활 교육 추진 기본 계획'의 목표치를 2018년도의 진척 상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계속)

2018년도 식생활 교육 백서 개요 및 포인트

〈제1부 식생활 교육 추진 정책을 둘러싼 상황〉

- (특집) 건강수명 연장으로 연결되는 식생활 교육 추진
  건강수명 연장으로 이어지는 식생활 교육 현황을 분석하고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중요한 일상적인 식생활을 상황을 소개

〈제2부 식생활 교육 추진 정책의 구체적인 대응〉

- (제1장) 가정에서 식생활 교육 추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아침밥 먹기' 국민운동 추진 등 어린이의 기본적인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대응, 임산부 및 영유아에 관한 영양지도, 보육원 등에서 식생활 교육 추진
- (제2장) 학교, 어린이집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추진
  영양교사 배치 촉진 등 학교에서 식(食)에 관한 지도체계를 보완하고 학교 급식을 통한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하여 지역에서 소비) 등의 활용, 취학 전 어린이에 대한 식생활 교육 추진
- (제3장) 지역에서 식생활 교육 추진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추진, 구강보건에 관한 식생활 교육 추진, '일본형 식생활' 실천 추진, 식품 관련 사업자에 의한 식생활 교육 추진
- (제4장) 식생활 교육 추진 운동 전개
  '식생활 교육 월간'기반의 행사 진행 , 식생활 교육 추진 등에 대한 표창 실시, 도도부현(일본 광역 자치단체) 및 시정촌(일본 기초자치단체)에서 식생활 교육 추진 계획 작성에 관한 상황
- (제5장) 생산자와 소비자 교류 촉진, 환경과 조화된 농림어업 활성화 등
  농박(농촌 체류형 관광)이나 농림어업 체험 등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를 촉진, 지산지소 추진, 식품 손실 감소를 목적으로 한 대응
- (제6장) 식문화 계승을 위한 활동
  자원봉사자 등을 통해 식문화 계승 활동, '일식(和食)' 보호 및 차세대로 계승을 위한 대응
- (제7장) 식품 안전성 및 영상 등에 관전 정보 제공 추진
  리스크 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 충실, 식품 안전에 관한 정보 제공, 영양성분표시 보급 및 계발(啓發)
- (제8장) 조사, 연구 및 기타 정책 추진
  국민 건강·영양 조사 실시 및 활용 상황, 일본식·식문화 해외 발신 등

〈제3장 식생활 교육 추진 정책 목적과 현황 평가〉

제3차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목표치의 2018년도 진행 상황

※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http://www.maff.go.jp/j/press/syouan/hyoji/190604.html) (2019.6.4.)
일본농업신문(https://www.agrinews.co.jp/p47851.html) (2019.6.5.)

수입규제 및 스마트 농업 활력 플랜 과제



❍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7일, 농림수산업개혁 기본방침 '농림수산업·지역활력창조 플랜'에 농림수산물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과 스마트 농업 보급 추진 등 4가지 정책과제를 새롭게 제안함.

- 새로운 플랜은 예산편성 및 법제도 재검토의 토대가 될 것으로 보임.

❍ 또한 정부는 농림수산업·지역활력창조본부를 설립함. 본부장을 맡고 있는 아베신조 총리는 생산농업소득[14]이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며 "흐름을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 충실한 정책을 갈고 닦아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것 이상으로 강하게 전개해야 한다"고 말함.

❍ 새로운 과제로 ① 수출 확대를 위한 규제 대응 강화, ② 스마트농업을 추진하는 신기술의 현장 도입, ③ 농업과 복지 연계, ④ 전략적인 지적재산 보호를 제안함.

- (수출확대) 규제에 대한 일원적인 교섭이나 국내 수속을 관리하는 사령탑 조직을 농림수산성에 설치하고, 체계 강화를 위한 법제도화 등을 검토함. 이를 통해 수입규제 국가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임.

- (스마트 농업 추진) 영농 유형별 미래상 등을 나타내는 '농업 신기술 현장 도입 추진 프로그램(農業新技術の現場実装推進プログラム)'을 책정하여 현장에 보급을 가속화 함. 영농 유형별 미래상이나 기술별 로드맵, 단계별 진행 등을 통해서 스마트 농업을 보급함.

- (농업과 복지연계) 노동력 부족에 직면한 농업현장 실태와 장애인 삶의 보람 창출이라는 양면을 간파하여 활동목표 등을 규정한 '추진 비전'을 통해 활동을 확산함. 농업과 복지 연계의 장점을 알리고 매칭 구조를 구축할 계획임.

---

14) 생산농업소득 = 농업총산출액 × $\frac{\text{농업조수익(경상보조금 제외)} - \text{물적경비}}{\text{농업조수익(경상보조금 제외)}}$ + 경상보조금

- (지적재산 보호) 와규(일본 소)의 정액·수정란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와규 유전자원 유통관리 체제 강화를 목표로 함. 법제·운용상의 대응책을 검토하여 신속하게 실시함. 식물 신품종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 실효성이 있는 보호책도 검토함.

※ 자료: 일본농업신문
(https://www.agrinews.co.jp/p47883.html) (2019.6.8.)